

협동조합의 조직성과와 영향요인, 그리고 유형의 조절효과: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Analysis of Cooperati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fluencing Factors,
and Moderating Effects of Type:

Using Cooperative Management Disclosure Data

김 세 운** · 정 현*** · 서 인 석****

Kim, Sae-Woon · Jeong, Hyun · Seo, In-Seok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III. 연구 설계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을 검증하고자 진행되었으며, 협동조합의 인증유형인 일반
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절효변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일환으로서 지분보유율이 아닌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또한,
조합원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겸임을 통해 스스로 자금자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 본 논문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BK21PLUS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관리번호
21B20151413334).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공동저자,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

**** 교신저자,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논문 접수일: 2019. 4. 24, 심사기간: 2019. 4. 24 ~ 5. 21, 게재확정일: 2019. 5. 21.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협동조합 2017년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종속변수로 선정된 당기순이익에 대해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모형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당기순이익의 분석결과 홈페이지, 겸직임원비율, 자본금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비율, 출자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종속변수인 지역사회기여실적에서는 설립목적, 홈페이지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결정기구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상호작용항에서는 경제적 요인인 당기순이익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성과를 지향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될 요인들과 인증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 주제어: 협동조합, 성과영향요인, 인증유형, 단계적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he cooperative, and analyzed the cooperative's authentication type, general cooperative and social cooperative, as moderating effects. As a part of the social economy, cooperative makes decision of the union under the heading of one person rather than the ownership ratio of the social economy. The union members are also self-sufficient as producers and consumers and contribute to the commun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previous research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ance of the cooperatives, and conducted the analysis using the data published in 2017 of the cooperative association provided by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model improvement from the first stage to the third stage was done for net profit result selected as the dependent varia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net profit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the homepage, (+). And the ratio of employees and investment (-) are negative. Second, in the subordinate variable, community contribution results,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homepage are positive (+), and the number of decision making organizations is negative (-). Third, only the net profit, which is an economic factor,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interaction ter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has a policy implication in terms of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the cooperative's performance and the effect of the adjust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certification.

□ Keywords: Cooperative, Performance Influence Factor, Authentication Typ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 서론

현대사회는 급격한 과학기술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한 기술발전의 이면에는 고령자 빈곤, 청년실업, 취약계층의 빈곤문제 등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도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에 취약한 사회적 취약계층은 생활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선별적 복지지향에서 더 나아가 보편적 복지제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일부 보편적 복지 실시국가들의 실패사례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복지의존증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전영준, 2013: 70). 또한, 고용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여러 고용정책들이 실패함에 따라, 단순한 세금 투입을 통한 고용창출이 한계에 도달하고, 과세부담자와 수혜자 간의 비 일치성 등의 논의가 대두되었다(전희정·서동희, 2015: 38). 즉,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 문제의 경우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주체인 정부와 기업 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대두되었으며, 시장경제의 소비자들이 직접 사회적 문제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직하게 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치되는 특징의 협동조합과 직접적인 고용과 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띠는 기업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나뉜다(이은선·이현지, 2017: 110).

특히,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를 띠며, 기업은 생산의 주체로서 시장에 참여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향과 함께 조합원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급자족의 형태를 띤다. 즉, 소비자가 생산자로서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조합원으로서의 의사결정에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리지 않고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을 바탕으로 조합의 운영에 참가할 수 있다(김경희, 2013: 137).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연구(김연정, 2012; 김학실, 2011; 송백석, 2011; 김두년, 2012; 이현주·조성숙, 2013; 류창호, 2015)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에 치우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협동조합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는 기업의 성과데이터 수집의 한계와 사회적 경제 기관으로서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 직접적인 해결을 위한 협동조합을 연구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법·제도적 측면에 치우친 것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란 상이성을 가진 인증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인증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협동조합

산업혁명의 시작과 함께 근대사회가 시작된 시점에서 협동조합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Birchall(1997)은 협동조합이 1760년 영국의 해군공창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협동조합 이론가들은 1844년 영국의 ‘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로치데일 공정개혁자조합)’이 근대적 협동조합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강민수, 2016). 현재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현주·조성숙, 2013).

사회적 경제는 근대 자본주의가 발달됨에 따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동으로서 등장한 개념으로(신명호, 2009; 홍효석·김예경, 2016), 1830년 프랑스의 Dunoy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오단이, 2013). 이후 1990년대에 프랑스의 Gide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이주호, 2013).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조직분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Defourny(2001)는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조직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경제영역으로 보았고, Noya & Clarence(2007)은 국가와 시장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으로, 사회적 및 경제적 요소를 두루 갖춘 조직으로 정의했다(강민수, 2016). 사

회적 경제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현주·조성숙, 2013).

협동조합 역시 학문분야나 학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에서 정의한 내용을 따르고 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의 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그 사업체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목적을 가진 자발적 결사체’로 정의하고 있다(강민수, 2016; 전형수, 2013). 실제로 협동조합은 출자를 통해 자본을 축적했다는 점, 지배구조로 총회, 이사회, 감사, 경영자 등 기관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상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조합 자원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Defourny & Develtere, 2009; 김두년, 2012; 김복태·김대진, 2015; 이주호, 2013).

앞서 언급하였듯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였고, 특히 사회적·경제적 부문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이나 농업 등 불확실성이 강한 특정 분야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실패를 감소시키고 경제체제가 유지되도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와 경제 분야에 활력을 제공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경영목표가 이윤 축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생산을 감소시키며, 혁신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즉,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생산 활동 증가와 고용 및 부의 균형적 분배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Birchall, 2013; Hansmann, 1996; Zamagni & Zamagni, 2010; 강민수, 2016; 김복태·김대진, 2015; 임옥빈 외, 2016; 최혁진, 2010).

2. 협동조합의 성과

일반적으로 ‘성과(performance)’라는 용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성과’라는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의 정의가 어려운 실정이다(김인 외, 1991). 구체적으로, Deutsch(1980)는 성과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을 통해 이를 수 있는 특정한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Nachmias(1979)는 정책영향을 성과라고 인식하며, 정책에 따라 달성된 목적을 ‘성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성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한 정의 역시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역사적 배경과 범위, 대상과 집단 등에 따라 상이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협동조합의 성과를 정의하고자 한다. 앞서, 협동조합에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인 협동조합은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생산 활동 증가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강민수, 2016; 임옥빈 외, 2016).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고용 및 부의 균형적 분배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측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Birchall, 2013; 강민수, 2016; 김복태·김대진, 2016). 따라서 협동조합의 성과는 전통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측정되어야 하며(Ebrashi, 2013), 경제적인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고려해야 한다(Herman & Rez, 2004).

실제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제적 연구를 진행하는 EMES는 사회적 경제 및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해 크게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 등 두 가지로 구분 짓고 있다(Defourny & Nyssens, 2006). 뿐만 아니라, Dees & Anderson(2003)의 연구 역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성과를 경제적·사회적 성과로 분류하였고, 협동조합이 지속적인 경제적 자립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가진 조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김세운, 2018). 이에 본 연구에서도 협동조합의 성과를 경제적·사회적 가치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협동조합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여 얻게 되는 것(강동형, 2013)'으로, 사회적 성과를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 지원(양광석, 2016)'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도섭(2003)은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경영실태를 확인하고 순자본이나 순이익 등 재무관리실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용덕·김은희(2016)는 경제적 성과에 총매출액,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등을 측정하고, 사회적 성과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 등을 설정하였다. 김복태·김대진(2015)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를 사회적 기여나 연대 등에 초점을 두고 평가했다. 세부적인 지표로는 취약계층 고용정도,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기여 등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를 재무적 특성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으로 설정하였고(김희철, 2015; 최홍근·유연우, 2013; 홍효석·김예경, 2016), 사회적 성과를 '지역사회기여실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곽선화, 2009; 선남이·박능후, 2011; 최석현·남승연, 2015; 최준규, 2013).

3.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

사회적 경제의 영역인 사회적 기업 혹은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학자들은 많은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각각의 조직특성을 반영하여 성과요인을 설정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윤창출이라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목적 달성이라는 사회적 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강병준, 2014; 김숙연·김선구, 2016; 나선영·이성근, 2014; 선남이·박능후, 2011). 이에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조직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기업과 다르게 사회적 목적도 가진 기업으로 이중적인 목적을 지닌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특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raser, 1980). 특히, 본 연구의 조직요인으로는 설립연도와 직원비율, 설립목적의 유무, 홈페이지 유무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나선영·이성근(2014)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조직은 일반적인 조직과 다르게 충성고객층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판매량과 제품의 시장경쟁력이 중요함을 주장하면서, 설립연도가 이를 수록 해당 부문에 유리함을 주장하였다. 김아영 외(2014)는 협동조합 내 직원비율과 조합원 간 교류나 이사회의 개최횟수, 회의 참석률, 전문성 등 조직의 형식적 요인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정보의 공개 투명성, 의사결정 상 정보공유 등 조직의 내용적 요인 역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상주하는 직원이 존재할수록 경영 및 관리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고 주장한다. 신창섭·박창길(2013)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의 존재가 조합원의 정책에 대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기업의 목적과 같이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설립목적의 존재가 기업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조직요인을 측정하고자 협동조합의 '설립연도', '직원비율', '설립목적', '홈페이지' 등을 설정하였다.

둘째,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따른 공동소유 및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다른 관리 방식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의 출자 금액과 관계없이 한 사람이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의사결정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아영 외,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요인으로 의사결정기구 수와 겸직임원비율(조합원 중 이사비율) 등으로 설정하였다. 손범규(2012)는 조직 내 의사결정과 관련한 네트워크 측면이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의사결정기구의 수나 권한 등이 조직 내 적절하게 분배되는 것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갑두

(2017)는 소유주인 조합원과 운영주체인 이사회 등의 규모나 비율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의사결정측면이 조직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양화석·김인호(2001)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조합원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조직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독립변수인 의사결정요인을 '의사결정기구 수', '겸직임원비율'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조합원의 출자금과 정부의 지원금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이러한 경제요인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수창·정우열, 2014). 구체적인 경제요인의 요소로는 출자금, 영업외수익, 자본금을 설정하였다. 이수창·정우열(2014)은 정부지원금이 과도할수록 오히려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면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최석현·남승연(2015)은 협동조합의 재무적 역량인 자원의 충분성, 자금조달능력 등이 조직의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경식 외(2015)의 연구도 협동조합의 출자금, 영업외수익 등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독립변수인 경제요인을 '자본금', '출자금', '영업외수익'으로 설정하였다.

4. 협동조합의 인증유형

2009년 12월 UN은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2012년으로 지정하여 각각의 국가들이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류창호, 2015). 구체적으로,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등의 국제기구는 2000년대부터 꾸준히 각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를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김두년, 2012). 즉,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정세에 부합하여 국내도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모델 구축을 위한 대응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논의되었다. 실제로 2012년 1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전형수, 2013). 이는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반으로 규정한 법이다(이현주·조성숙, 2013). 해당 법률의 발효로 기존의 농협, 수협, 생협 등 8개 개별법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만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했던 부분이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임옥빈 외, 2016). 구체적으로, 노동이나 복지, 주택 등 거의 모

든 영역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이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조직화할 수 있게 되었다(송인방, 2013). 이렇듯 「협동조합기본법」은 소시민이나 사회적 약자 등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협동조합에게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전형수, 2013).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각각의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했으며, 협동조합의 인증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 지었다는 특징을 보인다(임종선·조상혁, 2014). 구체적으로, 일반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제2조 제3호)’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협동조합에는 영리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두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을 설정하였다(류창호, 2015). 아래의 <표 1>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인가
설립동의자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5인 이상(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법정적립금	잉여금의 10% 이상	잉여금의 30% 이상
배당	가능(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금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감독	감독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	필요시,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 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자료: 기획재정부(2015), 이현주·조성숙(2013)의 내용을 재작성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신설된 것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 것이었으며, 협동조합에게 법인격을 부여하고, 담당 주무관청을 지정함으

로써 지원이나 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였다(이현주·조성숙, 2015). 또한, 협동조합을 활성화 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사회적 경제 분야를 강화하고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주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새로운 활성화를 부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주호, 2013).

또한,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공헌하는 조직으로서의 협동조합이라는 맥락을 바탕으로(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업종에 무관하게 영리, 비영리 여부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에 비해 비교적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공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하며, 배당이 금지된 성격을 가진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기관으로서 국세,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부과금에 대해 면제를 받으며 각종 정부사업에 참여함에 있어서의 이점을 갖는다.

이러한 국내의 협동조합에 대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따라 협동조합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에 인증유형을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즉, 협동조합 내 3가지 요인이 협동조합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인증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협동조합의 인증유형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되며, 이 두 협동조합은 비영리성과 공익성 등의 부분에서 조직의 성과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임종선·조상혁, 2014).

실제로, 천미림·김창수(2011)와 반혜정(2013)의 연구 결과, 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지향하게 되면, 조직의 이미지개선과 브랜드 파워 등을 통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생할 수 있음이 증명된바 있다. 또한, 지성구(2010)는 조직이 공익가치 추구가 사회공헌 활동을 유발하게 되어, 지역사회에 문화·환경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즉,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목적과 조직의 방향성이 일부 상이하고, 이러한 차이가 각각의 협동조합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인증유형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5.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먼저, 국내에서 협동조합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한다. 첫째, 협동조합에 관한 역사 및 발전방안, 그리고 현재까지 논의된 연구현황 등 협동조합 자체에 주목하는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강민수, 2016; 이현주·조성숙, 2013; 임옥빈 외, 2016; 전형수, 2013). 강민수(2016)는 현재까지 논의되어온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검토하고,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동조합에 대한 각각의 연구자의 이론과 주장의 핵심을 정리했다. 임옥빈 외(2016)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고, 현재 협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밝혔다. 또한, 현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된 모델 구축을 위한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들(이현주·조성숙, 2013; 전형수, 2013)은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전형수(2013)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등장하여 협동조합의 유용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제촉진 효과, 중산층의 경쟁력 제고, 시장 안정화 및 다원화 효과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 협동조합에 대한 법·제도적 흐름에 집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김두년, 2012; 류창호, 2015; 이주호, 2013; 장종익, 2011; 전형수, 2004). 김두년(2012)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협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들의 권한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법령의 체계적인 정합성 구축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해야한다는 점, 새로운 협동조합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의 성과에 대한 선행연구들(김아영 외, 2014; 김용덕·김은희, 2016; 박우영 외, 2016; 배귀희 외, 2014; 이도섭, 2003; 최석현·남승연, 2015)이 존재한다. 다만, 협동조합의 성과평가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김용덕·김은희, 2016; 이도섭, 2003)과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한 주제의 선행연구들(김아영 외, 2014; 배귀희, 2014; 박우영 외, 2016; 최석현·남승연, 2015)로 구분된다. 김용덕·김은희(2016)는 협동조합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16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크게 재무, 내부프로세스, 고객, 학습과 성장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 짓고, 각 영역에 세부사항의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호남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사례를 평가하였다.

한편,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인 박우영 외(2016)는 신용협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사회공헌활동의 변수로는 공익사업, 기부협찬, 자원봉사, 이미지, 브랜드 등으로 설정하였고, 사회공헌활동이 이미지를 경로하여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최석현·남승연(2015)은 생

활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의 조직역량과 네트워크 활용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역량은 행정·인적자원·관리기술·의사소통·재무·리더십·비전·거버넌스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네트워크 활용은 조직이나 집단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활용이 생활협동조합의 경제적 성과에 중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고, 의사소통이나 거버넌스 역량과 같은 영역도 더불어 중요한 변수임을 주장했다. 김아영 외(2014)와 배귀희 외(2014)의 연구는 조직의 리더십(이사회의 결정능력, 기업가 정신 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고, 리더십이 조직원의 직무몰입과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표 2〉 협동조합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연구대상	연구자	연구내용
협동조합	강민수(2016)	연구흐름정리
	임옥빈 외(2016)	협동조합의 역사정리 및 발전된 모델제시
	이현주·조성숙 (2013)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연구
	전형수(2013)	
법·제도	김두년(2012), 류창호(2015), 이주호(2013), 장종익(2011), 전형수(2004)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연구
성과 영향 요인	김용덕·김은희(2016)	협동조합 평가지표 연구
	박우영 외(2016)	신용협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
	최석현·남승연(2015)	생활협동조합의 조직역량과 네트워크 활용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검증
	김아영 외(2014)	리더십이 협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검증
	배귀희 외(2014)	

종합적으로 앞서 선행연구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농업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 특정한 협동조합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한 것이 아닌,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을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가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합의 성과를 경제적·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과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가치를 명확히 파악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을 토대로, 협동조합의 유형(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영향까지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도적 환경을 명확하게 반영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변수 및 가설

본 연구는 협동조합이 월 230여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김영재 외, 2017)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 2가지로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김두년, 2012; 이주호, 2013), 조직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함께 분석하여 유형에 따른 성과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2장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변수 및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의 세부적인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조절변수	인증유형	(1)일반협동조합, (2)사회적협동조합	
종속변수	경제적 성과	당기순이익 원	
	사회적 성과	지역사회 기여 실적 (0)없음, (1)있음	
독립변수	조직요인	설립연도	(1)2017년, (2)2016, (3)2015, (4)2014, (5)2013 이전
		직원비율	직원/전체 조합원 (%)
		설립목적	협동조합홈페이지 내 기업 목표 기재 유무 (0)없음, (1)있음
		홈페이지	협동조합홈페이지 내 홈페이지 기재 유무 (0)없음, (1)있음
	이사결정요인	이사결정기구 수	개소
		겸직임원비율	이사/전체 조합원 (%)
	경제요인	자본금	원
		출자금	원
영업외수익		원	

한편, <표 3>에서 설정한 연구 변수를 토대로, 본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설정할 수 있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조직요인은 선행연구(김아영 외, 2014; 신창섭·박창길, 2013)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설립연도가 오래될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직원비율이 높을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설립목적이 존재할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홈페이지가 존재할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독립변수의 의사결정요인은 선행연구(손범규, 2012; 양화석·김인호, 2001; 이갑두, 2017)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의사결정기구의 수가 많을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겸직임원비율이 높을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독립변수의 경제요인은 선행연구(최경식 외, 2015; 최석현·남승연, 2015)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3-1. 자본금이 높을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 출자금이 높을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 영업외수익이 증가할수록 협동조합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유형이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각 유형에 따라 조직의 설립목적 및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에 착안하여 인증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보다 조직요인에 따른 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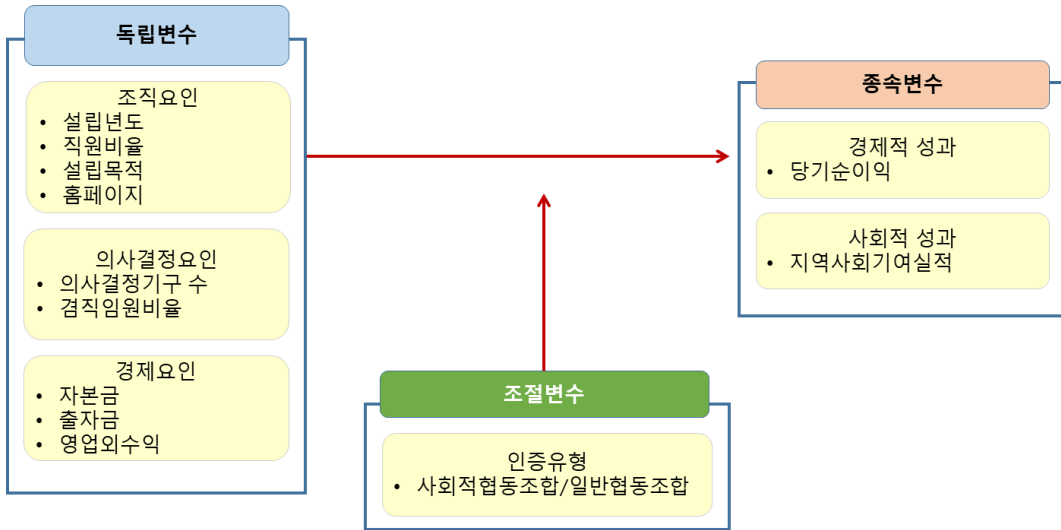
가설 4-2.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보다 의사결정요인에 따른 성과가 더 낮을 것이다.

가설 4-3.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 보다 경제요인에 따른 성과가 더 높을 것이다.

2. 연구 모형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협동조합 경영공시’의 2017년도 자율공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기업의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합에 대한 기본정보와 재정 및 성과, 활동상황, 사업 결과 등을 제공한다(협동조합 홈페이지). 앞서, ‘연구

변수 및 가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고 아래의 <그림 1>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연구 모형

IV. 연구 결과

1.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2017년 협동조합 자율공시에 응답한 620여개의 전체 협동조합 중 매출액이 없거나, 정보가 누락된 조합 140개소를 제거한 본 연구에 활용된 조합은 총 480개소이다. 조합형태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은 429개소로 89.4%로 나타났으며, 일반협동조합은 51개소 10.6%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편향된비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협동조합기본법 49조의 2(경영공시)’에 따라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경영공시에 참여하게 되어있으나,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200인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이상) 조합에 대해서만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빈도분석결과와는 <표 4>와 같다. 첫째로, 종속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기여실적은 없음이 196개소로 40.9%로 나타났으며, 있음은 283개소

59.1%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유무는 없는 조합이 420개소 87.7%,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 59개소 12.3%로 나타났다. 둘째로, 독립변수에서 설립연도의 경우, 2014년 이전이 169개소 35.2%로 가장 높았고, 2016년 127개소 26.5%, 2015년 111개소 23.1%, 2017년 67개소 14.0%, 2018년 6개소 1.3%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목적은 공시자료에 설립목적은 기재한 기업은 454개소 94.6%, 기재하지 않은 기업은 26개소 5.4%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유무는 홈페이지가 있는 기업은 454개소 94.6%, 없는 기업은 26개소 5.4%로 나타났다. 의사결정기구에서는 의사결정기구가 2개인 조합이 345개소 7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개 73개소 15.2%, 3개 38개소 7.9%, 없음 24개소 5.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빈도분석

항목		빈도(%)	
종속변수	지역사회기여실적	있음	283(59.1%)
		없음	196(40.9%)
독립변수	설립연도	2018년	6(1.3%)
		2017년	67(14.0%)
		2016년	127(26.5%)
		2015년	111(23.1%)
		2014년 이전	169(35.2%)
	설립목적	있음	454(94.6%)
		없음	26(5.4%)
	홈페이지	있음	268(55.8%)
		없음	212(44.2%)
	의사결정기구	없음	24(5.0%)
		1개	73(15.2%)
		2개	345(71.9%)
3개		38(7.9%)	
조절변수	인증유형	사회적협동조합	429(89.4%)
		일반협동조합	51(10.6%)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첫째로, 종속변수의 결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의 평균값은 11,481,878.79로 협동조합의 연간평균 당기순이익이 115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의 고용은 평균적으로 5.34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독립변수의 경우 직원비율은 평균적으로 0.1470으로 총 조합원 중 14.7%가량이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비율은 0.3405 34%가량이 이사

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의 경우 158,000,000원이 평균값으로 나타났으며, 1억5천8백만 원 가량이 평균 자본금으로 나타났다. 출자금의 경우 130,000,000이 평균값으로 1억3천만 원 가량이 평균값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외수익의 평균값의 경우 65,168,760로 6천5백만 원 가량이 평균값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술통계

항목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종속 변수	경제적 성과	당기순이익	480	-830,425.621	1,897,515,508	11,481,878.79	117,900,000
독립 변수	구조 요인	직원비율	480	0	1	0.1470	0.2375
		의사결정 요인	이사비율	480	0	1.556	0.3405
	경제적 요인	자본금	480	-325,267,871	13,835,215,012	158,000,000	763,000,000
		출자금	480	0	14,024,000,000	130,000,000	746,700,000
영업외수익		480	-816,077	3,763,286,958	65,168,760.05	247,800,000	

2.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에 관한 분석 결과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2개(당기순이익, 지역사회기여실적)를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로, 경제적 성과인 당기순이익의 경우, 3단계의 모형을 구성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¹⁾'을 실시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협동조합의 조직요인(설립연도, 직원비율, 설립목적, 홈페이지유무)과 함께 의사결정요인(의사결정기구 수, 겸직임원비율)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 모형에서는 기업의 경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경제요인(자본금, 출자금, 영업외수익)을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조직형태(사회적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투입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성과인 지역사회기여실적의 경우 종속변수가 0과 1로 범주형 변수이기에 로지스틱 회귀방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1) 단계적 회귀분석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를 차례로 투입하여 두 단계 이상 진행되면서 도출된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각 독립변수의 유의성 등을 검토하는 회귀분석 방법론 중 하나이다(이학식, 2012: 78).

1) 당기순이익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결과

당기순이익을 종속변수로 선정한 첫 번째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R^2 0.013). 구조요인과 의사결정요인을 투입한 1단계 모형보다 경제요인을 투입한 2단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모형 개선이 이루어졌다(ΔR^2 0.299).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를 살펴본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 모형도 전 단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개선되었다(ΔR^2 0.555). 또한, 잔차 간의 독립성확인을 위하여 Durbin-Watson 검증결과 결과치가 2.551로 오차항간 자기 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중공선성 값인 VIF 값은 자본금과 출자금, 영업외수익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모두 10 이하의 값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본금과 출자금, 영업외수익에서 10이 넘는 값을 나타냈으나 이는 두 가지의 이유로 해소될 수 있다. 첫째, 자본금은 출자금과 영업외수익을 내포하는 지표형 변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은 VIF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 조절변수의 분석에 있어서 변수 간의 곱셈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분석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Paul Allison, 2012). 이에 본 연구는 분석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당기순이익을 종속변수로 선정한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6>와 같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직원비율, 홈페이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분석결과 1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직원비율과 홈페이지가 기각되었으며, 새롭게 투입된 자본금, 출자금, 영업외 수익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 상호작용항 투입 결과, 2단계에서 기각되었던, 직원비율과 홈페이지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겸직임원비율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2단계 유의하게 나타났던 영업외 수익은 기각되었다. 3단계는 2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영업외수익이 기각되었으나, 1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직원비율과 홈페이지가 다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유형*의사결정기구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작용항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최종 분석에 투입되는 3단계에서 직원비율은 당기순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는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임원비율은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은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금은 당기순이익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설립연도는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직원비율은 조합원의 직원비율이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일반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설립목적은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일반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홈페이지는 조합의 홈페이지유무가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겸직임원비율 조합원의 임원겸직비율이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

이 당기순이익에 큰 양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자본금은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출자금은 출자금은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일반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에 더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영업외수익은 영업외수익은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수 ‘당기순이익’

종속변수	당기순이익		
	1단계	2단계	3단계
상수값	-2.696E7	-4946209.616	-1.275E7
설립연도	4950244.271(-.803)	3509261.862(.033)	3922925.508(.037)
직원비율	5.405E7(.989)**	3789563.505(.008)	-1.113E8(-.224)**
설립목적	4178386.697(2.370)	4197485.408(.008)	-1.603E7(-.031)
홈페이지	1.851E7(1.668)*	1.459E7(.062)	1.863E7(.079)**
의사결정기구 수	1497950.251(.173)	-9226762.708(-.050)	2496701.599(.013)
겸직임원비율	-1.527E7(-.875)	-1.340E7(-.037)	4.839E7(.132)*
자본금		.212(.373)***	.342(2.216)***
출자금		-.196(-.239)***	-.368(-2.327)***
영업외수익		.059(.124)***	-.025(-.052)
유형*설립연도			-5.548E7(-.166)***
유형*직원비율			8.454E8(.359)**
유형*설립목적			1.383E8(.085)**
유형*홈페이지			-6.136E7(-.079)**
유형*의사결정기구 수			2.890E7(.064)
유형*겸직임원비율			-5.825E8(-.471)***
유형*자본금			.443(2.387)***
유형*출자금			-.487(-2.682)***
유형*영업외수익			.164(.113)**
$R^2(Adjusted R^2)$	0.013	0.299	0.537
F	2.051*	23.664***	31.902***
$\Delta R^2/\Delta F$	0.025/2.051*	0.286/65.217***	0.243/27.935***
Durbin-Watson	2.551		

*p<0.1, **p<0.05, ***p<0.01

※ 계수는 비표준화, 괄호안은 표준화계수임

2) 지역사회기여실적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지역사회기여실적을 종속변수로 선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Nagelkerke R^2 0.160, Cox&Snell R Square 0.119). Model Chi-square값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60.610^{***}).

지역사회기여실적을 종속변수로 선정한 모형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7>와 같다. 분석결과, 설립목적, 홈페이지, 의사결정기구 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우선, 설립목적은 지역사회기여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1.167)=3.212$ 로 확인되어 기준 '1'에 준해 설립목적이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 지역사회기여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2.212배 높았다. 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이 목적이 뚜렷할수록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분석결과는 시사한다. 둘째, 홈페이지는 지역사회기여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ext{Exp}(0.367)=1.444$ 로 확인되어 기준 '1'에 준해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보다 있는 경우 지역사회기여실적이 0.444배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홈페이지의 존재는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유대를 가능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의사결정기구 수는 지역사회기여실적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기구의 수가 증대할수록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0.273배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구가 늘어나면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참여수준이 늘어나는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은 때론 참여를 약화시키고 지역사회 협력사업 및 운영을 지연시킴으로써 관계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물론, 선행연구들은 다층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공공선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인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표 7〉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지역사회기여실적’

종속변수	지역사회기여실적				
	단위	B	S.E.	Sig.	Exp(B)
설립연도		-.052	.097	.590	.949
직원비율		-.997	1.549	.520	.369
설립목적		1.167**	.512	.023	3.212
홈페이지		.367*	.208	.078	1.444
의사결정기구 수		-.318*	.171	.063	.727
겸직임원비율		.234	.836	.779	1.264
자본금		.000	.000	.297	1.000
출자금		.000	.000	.519	1.000
영업외수익		.000**	.000	.025	1.000
유형*설립연도		.525	.419	.211	1.690
유형*직원비율		9.178	13.615	.500	9677.594
유형*설립목적		-.299	2.605	.909	.741
유형*홈페이지		.238	.801	.766	1.269
유형*의사결정기구 수		.512	.580	.377	1.668
유형*겸직임원비율		-9.129	7.111	.199	.000
유형*자본금		.000	.000	.116	1.000
유형*출자금		.000	.000	.559	1.000
유형*영업외수익		.000	.000	.155	1.000
상수값		.152	.682	.824	1.164
2-Log-Likelihood				588.586	
Model Chi-square				60.610***	
Hosmer & Lemeshow test				3.476	
Nagelkerke R^2				0.160	
Cox&Snell R Square				0.119	
예측 정확률				65.4	

V. 결론

본 연구는 협동조합의 성과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2017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여 성과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인증 유형인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조절효과를 살펴, 협동조합의 성과증진을 위한 정책효과성과 정책집행체계에 있어서의 함의를 제시하고 했다. 본 연구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인 당기순이익의 분석결과 홈페이지, 겸직임원비율, 자본금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의 경우, 조합원들과 소비자들에게 명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홈페이지가 구비되어있는 것이 실제적인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나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정보전달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조합들의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겸직임원비율의 경우, 모든 조합원이 일인 일표원칙을 행사하는 조합원 총회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도 조합원들이 직접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적의사결정의 지향이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조합의 자본금이 당기순이익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충분히 조달되었을 경우 사업추진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 자료 수집 시, 조합의 당기순이익이 없거나 적자인 기업들의 경우 그 사유로 자본금의 부족을 주된 이유로 기재하였다. 대부분의 자본금이 후원과 출자금을 통해 형성되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자본금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직원비율, 출자금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비율의 경우, 직원비율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조합원 내 소비자비율은 줄어든다는 의미로서 조합 내 생산의 소비가 낮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조합의 성과지향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자금의 경우, 조합원들이 많은 출자금을 낼수록 당기순이익이 떨어진다는 결과로서, 이는 협동조합이 형성되는 형태에 따른 상이한 결과라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형태의 조합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의 후원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조합의 경우 비교적 많은 자본금과 안정적인 생산소비시스템을 갖춘 반면 비교적 출자금이 적은 형태를 나타낸다. 즉, 협동기관의 형성 주체에 따른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합형성의 차이에 따른 출자금에 대해 일부인원 일정금액 이상의 출자금이 출자된 조합에 대한 컨설팅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요인인 지역사회기여실적에서는 설립목적, 홈페이지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목적의 경우, 협동조합 본연의 목표인 지역사회 및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목적의식을 가진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 유무의 경우 홈페이지가 운영될수록 사회적성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활한 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적정한 유대를 가능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조합의 뚜렷한 목표의식과 조합원과 소비자 간의 소통창구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상호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조합의 사회적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결정기구 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편적으로 의사결정 기구가 늘어나면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고, 참여수준이 늘어나는 강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때론 참여를 약화시키고 지역사회 협력사업 및 운영을 지연시킴으로써 관계자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물론, 선행연구들은 다층적인 의사결정기구가 공공선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인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검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상호작용항에서는 경제적 요인인 당기순이익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직원비율, 설립목적, 자본금, 영업외수익이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보다 조절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금, 영업외수익, 직원비율은 조합원의 영리 지향에 중점이 맞춰진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 기업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립목적 또한, 구체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목적을 기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립연도, 홈페이지, 겸직임원비율,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조절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협동조합 본연의 성격인 민주적 의사결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겸업, 조합원 전체의 출자 등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립연도의 경우, 일반협동조합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법·제도적으로 시작된 시점이 늦은 것을 볼 때, 의사결정 시스템의 성숙을 위한 기한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의 경우, 조합원 간의 정보전달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제공에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에 비해 더 주요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협동조합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증유형에 따라 상이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는 각각 상이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성과의 경우 경제요인이 주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성과의 경우 구조요인이 주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각의 성과에 상이한 요인과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협

동조합의 복합적인 성과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등 각각의 성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요인에 대한 조절효과는 의사결정기구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의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상이한 인증유형을 고려한 경제적·사회적 성과 증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시간적 배경이 2017년인 단연도로 맞추어져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시계열분석을 통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영향요인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는 실제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성과의 어려움이 아닌,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의 성과를 측정했고, 사업형태별 조절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조절효과를 실증 분석하여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성과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동형. (2013). 국내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민수. (2016). 협동조합 연구현황과 향후과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병준. (2014).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 분석. 공간과 사회, 49: 5-46.
- 곽선화. (2009).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연구, 2(1): 37-65.
- 기획재정부. (2015). 사회적협동조합 가이드북. 세종: 기획재정부.
- _____. (2018). 2018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세종: 기획재정부.
- 김경희. (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두년. (2012).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한국협동조합원연구, 30(2): 1-21.
- 김복태·김대진. (2015).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측정지표 개발 및 중요도 분석. 한국행정학보, 49(3): 303-331.
- 김세운. (2018). 사회적기업의 성과영향요인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숙연·김선구. (2016). 사회적기업 특성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상업교육연구, 30(4): 55-73.
- 김아영·최우석·장승권. (20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의 성역할 정체감,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성과. 여성경제연구, 11(1): 51-79.
- 김연정. (2012).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정책분석. 아시아연구, 15(3): 189-210.
- 김영재·안관영·이승일. (2017). 협동조합 조합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성과의 관계 및 사내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9(1): 131-143.
- 김용덕·김은희. (2016). BSC와 AHP를 활용한 협동조합 성과평가 모델. 산업경제연구, 29(3): 1303-1323.
- 김인·김영기·류기형. (1991).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성과측정 및 결정요인. 지방과 행정연구, 3(2): 155-224.
- 김학실. (2011). 한국·영국·일본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비교. 한국비교정부학보, 15(2): 129-154.
- 김희철. (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7): 1797-1812.
- 나선영·이성근. (2014). 사회적 기업의 경영특성이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연구, 16(3): 95-112.
- 류창호. (2015).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의 조직과 구조. 아주법학, 8(4): 287-320.
- 반혜정. (2013). 기업의 국제화 정도와 자본조달의 제약. 무역학회지, 38(1): 285-310.
- 박우영·박송춘·김주환. (2016). 신용협동조합의 사회공헌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4(1): 47-75.
- 배귀희·박시남·이운재. (2014). 사회적기업가 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3): 251-276.
- 선남이·박능후. (2011).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15(2): 141-164.
- 손범규. (20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의 사회네트워크와 조직성과.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백석. (2011). 사회적 경제모델과 한국의 사회적기업정책. 공공사회연구, 1(2): 5-32.
- 송인방. (2013).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소규모 창업 환경의 변화. 법학연구, 24(1): 365-402.
-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신창섭·박창길. (20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창출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1(2): 1-30.
- 양광석. (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영향요인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화석·김인호. (2001). 조직특성이 개인의 인적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기업경영연구, 15: 109-137.
- 오단이. (2013). 사회적경제 조직의 리더십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5(4): 285-311.
- 이갑두. (2017). 농업협동조합의 지배구조와 성과의 관계. 지역산업연구, 37(4): 353-379.
- 이도섭. (2003). 농협협동조합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연구, 11: 193-214.
- 이수창·정우열. (2014). 사회적기업의 성과결정요인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127-147.
- 이은선·이현지. (2017).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 제도화.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109-138.
- 이주호. (2013).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사회적 기업 환경변화 분석.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3(1): 73-104.
- 이학식. (2012).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회귀분석. 서울: 집현재.
- 이현주·조성숙. (201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과학연구, 29(1): 199-218.
- 임옥빈·신용준·안상봉. (2016).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의 역사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사학, 31(4): 119-139.
- 임종선·조상혁. (2014).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영리성과 공익성에 대한 소고. 흥익법학, 15(4): 337-373.
- 전희정·서동희.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2): 33-62.

- 장종익. (2011). 협동조합의 규모화와 조직전략. 한국협동조합연구, 29(2): 17-38.
- 전영준. (2013). 복지패러다임 전환의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학회, 61(2): 69-111.
- 전형수. (2004). 협동조합의 기관분화와 권한 분배. 한국협동조합연구, 22(2): 153-178.
- _____. (201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통합 효과. 한국협동조합연구, 31(1): 57-85.
- 지성구. (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3(4): 2251-2269.
- 천미림·김창수. (2011). CSR의 지속성이 CSR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9(3): 351-374.
- 최경식·남기포·유형석. (2015). 농업부문 신생 협동조합 사업활성화 요인과 네트워크 영향탐색에 관한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3(2): 27-54.
- 최석현·남승연. (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6(1): 133-155.
- 최준규. (2013). 사회적기업 성과에 대한 정책도구 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혁진. (2010). 협동조합의 경험에 기초한 사회적기업의 성장전략과 민관협력 및 제도개선 방안. 사회적기업연구, 3(1): 67-90.
- 최홍근·유연우. (2013).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에 대한 사례연구. 지방행정연구, 27(1): 351-378.
- 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coop.go.kr/>
- 홍효석·김예경. (20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관한 연구. 재무와회계정보저널, 16(1): 1-29.
- Birchall, J. (1997).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_____. (2013). The potential of co-operatives during the current recession. Journal of Entrepreneuri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y, 2(1), 1-22.
- Dees, J. G. & Anderson, B. (2003). For-Profit social ven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2(1), 1-26.
- Defourny, J. (2001). Introduction: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fourny, J. & Develtere, P. (2009). The Worldwide Making of the Social Economy. The Hague and Leuven: Acco.
- Defourny, J. & Nyssens, M.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Social Enterprise Journal, 4(3), 202-228.
- Deutsch, K. (1980). Politics and Government. Boston: Houghton Mifflin Co.
- Ebrashi, R. E. (2013). Social Entrepreneurship theory and sustainable social impact.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9(2), 188-209.

- Fraser, L. A. (1980). *Cooperatives in the Year 2000*. London: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 Hansmann, H. (1999). Cooperative firms in theory and practice. *LTA*, 48(4), 387-403.
- Herman, R. D. & Renz, D. O. (2004). Doing things righ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4(6), 694-704.
- Nachmias, D. (1979). *Public policy evaluation*. NY: St. Martin's Press.
- Noya, A., & Clarence, E. (2007). *The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Paris: l'OCDE.
- Paul Allison. (2012). "When Can You Safely Ignore Multicollinearity?". *STATISTICAL HORIZONS*. <https://statisticalhorizons.com/multicollinearity>
- Zamagni, S., & Zamagni, V. (2010). *Cooperative enterprise: Facing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김 세 운 (金世運):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영향요인분석: 조직형태 간 비교 및 사회적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적 경제, 고용정책, 복지정책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민원기관 통합조직의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017)"가 있다(swkim2002@skku.edu).

정 현 (鄭賢):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주택관리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단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혼합 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정도를 중심으로),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도시정책, 도시재생, 사회적 자본 및 사회적 혼합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2019, 주저), "근린환경과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9, 주저), "주택관리가 사회적 혼합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단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 단지와 비활성화 단지 비교연구"(2018, 주저) 등이 있다(hjeong@krihs.re.kr).

서 인 석 (徐寅錫):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공직사회 주요직위에 대한 연구주의 연결망 검증(한국행정학보, 2018)", "정책의제, 주도자, 그리고 문지기(한국지방행정학보, 2017)", "정책신념변화는 시간의 전유물인가(한국행정학보, 2016)",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한국행정학보, 2014)", "Factors affecting government-funded research(RAJT, 2018)",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in Expla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EDQ, 2018)"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쉽게쓴정책학(윤성사, 2019)", "정책이론핸드북(박영사, 2018)", "인트로행정학(대영문화사, 2017)" 등이 있다(inseok800414@naver.com).